

2015년 제3차 정책포럼

민주시민교육 변화지형과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주관: **시민**
사단법인 교육위원회

주최: 서울시 **NPO** 지원센터
공익활동, 더 쉽고 즐겁게

수록 목차

사 회 : **위정희** 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눔교육센터장/ (사)시민 교육위원장

- ▶ **진행안내**
..... 1

- ▶ **발표** : **김미란** 경기도 광명시평생학습원 원장/ (사)시민 교육위원
 <민주시민교육의 지형변화
 - 지역 기반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2

- ▶ **토론** : **이필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교육위원장 / (사)시민 교육위원
 <중간 지원조직 공공기관 거버넌스 사례 및 방향>
..... 11

- 김지수**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변화지형 만들기
 - 민주시민교육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 사례>
..... 19

- 오경옥** 청소년문화발전소 소장
 <기초단위의 거버넌스 사례>
..... 35

서울시NPO지원센터 제3차 정책 포럼 “민주시민교육 변화지형과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진행안내

사회 : 위정희 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눔교육센터 센터장

발표 : 김미란 (경기도 광명시평생학습원 원장)

토론 : 이필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교육위원장 /(사)시민 교육위원
김지수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오경옥 청소년문화발전소 소장

진행순서

시 간	순 서
13:30~14:00	○ 접 수
14:00~14:10 (10분)	○ 개 회 - 참가자 인사나누기, 포럼 취지 설명
14:10~14:30 (20분)	○ 발 표 지역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본 민주시민교육 지형의 변화 / 김미란 (경기도 광명시평생학습원 원장)
14:30~15:00 (각 10분씩, 30분)	○ 토 론 - 중간지원조직 공공기관 거버넌스 사례 / 이필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교육위원장) -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거버넌스 사례 / 김지수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기초단위의 거버넌스 사례 / 오경옥 (청소년문화발전소 소장)
15:00~15:50 (50분)	○ 참가자 종합토론
15:50~16:00 (10분)	○ 마무리

[발표]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책포럼 발표자료¹⁾

(민주)시민교육의 지형변화 - 지역 기반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김미란 광명시평생학습원장

1. 거시적 환경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0년 민선6기에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진보교육감이 주도하는 시도교육청에서의 추진력이 돋보인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5월 현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빠르면 8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산하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혹은 시민교육팀을 신설 및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차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협의회 추진 등으로 요약되면서 관련 사업과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입법활동도 19대 국회기간이 지난 말부터 올 해 연초에 가시화 되었다. 지난 1월 22일 이연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2월 5일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경기도의회 문경희(남양주시 2선거구-화도·수동·호평)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이 2015년 2월 11일 경기도의회의 제294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법으로 2014년 5월 26일 인성교육진흥법이 발의되어

1) 본 자료는 발표자가 최근에 참여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심포지엄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재구성하고, 현재의 흐름을 수정·보완한 것임

(대표발의: 정의화 의원) 201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전 세계 교육분야 최대 규모 회의인 '2015 세계교육포럼'이 201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폐회식에서 향후 15년간 전 세계의 교육 지침이 될 '인천선언'도 이 자리에서 발표되었다. 인천선언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기회를 진흥하는 것'을 새로운 교육 비전으로 삼았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명시됐다. 교육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은 9월 유엔 개발의제가 확정된 후 오는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기존의 '모두를 위한 교육 운동(Education For All, EFA)'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더 큰 노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를 계승해 9년의 초·중등 교육을 보장하고, 청년과 성인들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기회를 강조했다²⁾.

이렇게 2015년 현재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지형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시민교육을 이해하고, 적용하는가? 연구자 집단은 떠오르는 이슈인 (민주)시민교육을 관련 서적 출판과 집담회, 용역과제로 펼쳐 나간다. 최근 1~2년 사이에 우후죽순으로 시민교육을 표방하는 기관 및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지도자나 자격증 인증과정을 개설하고, 대학과 연계하는 등 그 행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간다. 그동안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주도하고 논의해왔던 실천단 위와의 연계는 부족해보여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다.

2. 공공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추진방향

1) 서울특별시

2014년 1월 9일 서울기획위원의 발의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

2) 2015 세계교육포럼 홈페이지 <http://www.wef2015.go.kr/wef/agenda/wefAgenda.do> 와 5월 22일 폐막식 보도자료 재구성함

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관련 조례에 의거한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에는 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②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③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함양에 관한 교육이 표방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가 제출한 자료³⁾에 따르면, **2015년 추진방향**은 시민의 현실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직접 민주주의 체험 및 시민력 향상이다. **2015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계·관련전문가 등으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적인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추진방안 등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시민대학 내 민주시민교육 과정 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 강좌에는 시민청의 26개 강좌, 권역별(성공회대,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10개 강좌 등이 제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2013-2014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교육저변 확대를 할 계획이며, 2015년 소요예산(안)은 112,000천원이다. 담당부서 주무관 전언에 의하면,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며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 있다.

2) 서울시교육청

2014년 12월 22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고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사회교사모임,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흥사단이 공동주최하고 흥사단교육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서울시교육청강당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등 비교적 활발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발표자료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발표자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혁신교육연구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시민과 미래가 주관한 2014년 12월 22일 정책토론회 자료집 참조함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발표자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혁신교육연구회가 주최

민주시민교육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책임교육과 산하에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여 <서울교육발전계획>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였고, 2012년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2015년 ‘민주시민교육과’ 신설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세계(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하였다. 민주시민교육과에는 학생자치,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 독서 및 인문사회교육,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4개팀이 구성되어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민주시민교육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래 청소년의 개인주의 경향 극복,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지닌 시민양성,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 재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일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성교육, 국민교육 차원에서 준법정신과 질서의식, 바른 품성 등 선(善)한 사람됨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 덕성 함양을 위한 도덕교육을 중심에 놓고 있다. **추진방향**은 ① 민주시민교육의 일관된 정책추진, ②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지도 역량 강화, ③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④ 열린 세계시민교육으로의 확대에 요약된다. 이를 위해 ‘세계교육도시 으뜸 서울’ 프로젝트(안)을 추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유네스코, 학교가 연계할 계획이다. 참고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안의 주요업무**로는 ① 체험중심의 민주시민교육지원, ②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내실화, ③ 국제이해교육 내실화, ④ 세계시민교육 강화, ⑤ 다문화와 탈북학생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체험중심의 민주시민교육지원에는 학생인권 증진 체계 구축(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보편적 인권교육 확대에 학생인권조례 교육 및 홍보, 학생인권동아리 지원, 노동 인권 인식 및 실태조사 등이 세부 추진될 계획이다.

3)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

서울시가 발표한 '교육도시 서울' 플랜에서 평생학습 파트를 총괄하게 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2014년 4월 3일 서울연구원 내에 문을 열었고, 2015년 상반기에 독립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서울시평생학습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발주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초대 이사장(윤여각 방통대

하고 사단법인 시민과 미래가 주관한 2014년 12월 22일 정책토론회 자료집 참조함

교수)과 원장(김영철 RTV원장)이 취임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14개 자치구는 훨씬 이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평생교육 6진 분류⁵⁾에 따른 시민참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교육과정은 전체적으로 비중도 적지만 점차 확산되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평생교육기관·단체가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총 6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네트워크 사업은 900만원 내외, 시민제안·주제지정 사업은 450만원 이내, 전문대 연계 직업특화 사업은 2천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1개 기관(단체) 당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사업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대학, 민간단체가 협력해 지역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시민제안 사업은 시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사업으로 직장인을 위한 야간·주말 강좌,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강화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등이 해당한다. 주제지정 사업에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속한다. 전문대 연계 직업특화 사업은 서울 소재 전문대가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사업설명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다⁶⁾.

4)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선거연수원이 대표적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용역, 세계의 시민교육 관련 자료 및 도서 번역작업, 민주시민교육전문가양성과정, 시민교육 박람회와 관련 심포지엄, 토론회를 운영하였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

5)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진화, 2009)란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나누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범주화시키는 위계적 준거 틀로,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에 대한 정의와 각 영역별 하위영역을 규정하였음. 6대영역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 구분되고(대분류), 시민참여교육은 하위영역으로 시민책무성프로그램, 시민리더역량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중분류)으로 구분되며 각종 세부프로그램 예시(소분류)가 되어 있음

6) 2월 23일자 연합뉴스

에서도 선거를 비롯한 교사와 학생연수, 민주시민교육방법론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공공기관 중 지역주민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동 자치회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시민교육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면 시민교육의 접근가능성과 프로그램 비중확대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붕어빵처럼 대동소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이천시가 2005년부터 14개 읍면동을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전환하여 전문평생교육사를 배치함으로써 프로그램이 7배 증가했던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는 물론, 지방정부의 우선순위와 지방재정과 무관하지 않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자원봉사센터, 종합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재가 투입되는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기관의 특성을 이용한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3. 민간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추진

민간영역에서는 흥사단과 참여연대의 시민교육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흥사단은 최근 민주시민교육 자격증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논의 Table을 주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꾸준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단체의 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는 매우 종합적인 선물세트와 같다. 이와 같이 시민교육에 대한 기관의 철학과 가치가 중시되는 조직에서는 전담자를 배치하고, 관련 사업을 꾸준히 하고 실시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표방하는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사단법인 시민의 활동이 돋보이며, 지역의 NGO재단 등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4.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서울지역의 통합적 시민교육과정이 디자인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교육 관련 주체들의 지속적인 논의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의 평생학습,

시민교육의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련사업과 동향을 모니터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생활단위에서 시민교육의 판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시민교육 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다. 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자는 물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체계를 만드는 인프라 조성에 힘써야 한다.

특히나 요즘처럼 마을단위나 자치구 단위에서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사업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평생교육과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기초자치구와 민간영역이 포괄하기 어려운 일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초단위에서나 할 수 있는 단위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전략하거나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볼 일이다. 시민교육의 판을 재구성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허브,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단위의 통합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 - 광명시 네트워크협의체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에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일을 하게 되어 지역의 네트워크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광명지역에는 네트워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민관연합구조로 시에서는 그간 관 중심으로 진행된 많은 것들의 운영주체를 관내 기관으로 이양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려나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학습과 참여, 연대와 실천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람을 잇고 마을을 잇는 협의체에 함께하는 기관은 총 272개 기관이다. 지금이 사회적경제시대임을 반영하듯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47개로 가장 많고, 초·중·고등학교가 46개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도서관과 아동, 청소년분야 기간이 각 41개로 많다. 광명시는 총 18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자치센터가 18개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별 기관들이 있다. 협의체가 처음 만들어진 2012년, 광명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행정단위 명칭 그대로 광명1

권역, 광명2권역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2년간 활동해온 협의체에서는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권역명칭으로 명칭 변경을 희망하였다. 광명1권역은 광명1동~3동까지인데 광명시에서 으뜸으로 제일가는 마을이라는 뜻을 담아 ‘으뜸터’ 권역이 되었고, 광명4동~7동인 광명2권역은 다함께 사는 우리마을의 의미를 담아 ‘다올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철산1동~4동까지는 철산권역인데 친구를 의미하는 지기라는 이름으로 포근하고 공동체성이 있는 마을의 염원을 담아 ‘철산지기’가 되었다. 하안 1동~4동까지는 하안권역인데 뛰어나거나 좋은 것, 닦고 싶은 것에 붙이는 처럼 사용하여 ‘하안처럼’이 되어 모범마을을 꿈꾼다. 소하동, 학운동은 소하학원권역인데 마을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는 예술의 터전인 마을을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에터지기’로 부른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각 권역이 꿈꾸는 ‘바람’이 담긴 권역의 명칭이라 훨씬 친근하고 다가가고 싶은 이름이다. 이와 같은 권역의 명칭변경이 더욱 의미있는 것은 권역의 위원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마을을 생각하고 고민한 과정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광명시네트워크협의체는 평생학습 권역별 실무위원회에서부터 평생학습실무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수순으로 모임을 가지고 의사결정 체계가 bottom-up으로 이루어진다. 5개권역의 권역별실무위원회가 월 1회 모임을 통해 마을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진다. 평생학습실무위원회는 권역별 위원회의 임원진과 지역 평생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며 월 1회 만남을 통해 학습도시 정책과 방향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의 세 바퀴가 굴러간다. 마지막으로 시장 및 교육장,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연 2회 중요한 정책과 사업예산 등을 결정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천천히 함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래에서부터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런 거버넌스체계가 기반이 되어 권역마다 일상의 평생학습축제가 2주간 진행되어 마을 전역이 학습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내 집 앞의 가장 가까운 시민학교, ‘느슨한 학교’가 런칭되어 지역에서 시민되기, 마을에서 시민되기를 위한 학습과 실천을 연계하고 있다.

2) 시민교육의 주체와 네트워크 강화

시민교육을 둘러싼 정치·제도적 환경에서 보듯이 서울시의 평생학습, 특히 시민교육의 지형은 대단히 복잡하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추진체계가 다양하고, 사업의 중복을 피할 방법도 쉽지 않다. 평생학습 영역에서는 기존의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관과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센터 등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만나고 있지만 민관협력과 소통의 방식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현장 활동가들의 우려와 착잡한 심정이 자주 토로되고 있다.

시민교육의 주체가 매우 산발적이며 시민교육의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주체들의 네트워크가 약하다. 아울러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기 이전에 교육의 주체, 당사자들부터 민주적이고 입체적인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부고백과 주장이 많은 상황이다. 물론 주체들의 환경이 민주시민교육에 집중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주체와 역량에 대한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 1]

중간 지원조직 공공기관 거버넌스 사례 및 방향

이 필 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교육위원장

1. 한국사회 시민교육의 변화 지형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민주주의의 기초는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판단하는 ‘시민사회’의 성장에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선 그 만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한국사회 역시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변화의 핵심동력은 시민운동이었고, 그 선두엔 시민운동단체가 있었다. 1990년 이후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활동도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급속한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됐고, 이 문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창립을 필두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났다.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시민단체들의 이념.의제.활동방식은 천차만별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활동이 기본 토대로 작동하였다. 현재는 정치.경제.지방자치.문화.여성.인권.반부패.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주시민교육들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간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시민교육의 각 영역을 포괄하여 민주시민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의 흐름이다. 1997년 10월 30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2000년

1월 3일 시민교육진흥법안이 의원 발의되었으나 의원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체는 학자그룹 중심의 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시민단체연대기구인 민주시민교육포럼,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민주개혁국민연합이 중심이 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이다. 또한 1998년 전국 시민단체들간의 협의체인 '시민단체협의회'는, 산하에 시민정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지도력 양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담론형성을 위한 소식지 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송창석, 2004) 또 한편에선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거 관변 단체로 불리던 자유총연맹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1998년)하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10년 6월에는 보수와 진보, 공공기관 및 학계의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 단체들이 결합하여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를 결성⁷⁾하였다.(『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심성보, p. 170)

최근에는 경희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후마니타스 칼리지 과정을 교양필수로 만들어, 대학 안에서 시민교육이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도 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진전된 한걸음이 시작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고, 학교내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과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시민운동의 흐름을 볼 때 향후 시민사회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급격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운동방식과 의제의 변화'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중운동에서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

7)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선거연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경실련,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선거시민모임, 볼런티어21,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참여.

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으로 운동방식이 변화되었다. 또한 80년대 경제적 성장 아래 다양한 계층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문제를 제기하는 생활정치에 관심이 높아져 기존의 '담론 중심 의제'보다는 삶과 밀착된 '생활의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늘어났고, 그 결과 1990년대 시민운동은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시민운동이 주도한 의제는 80년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나, 생존권 투쟁이라 불렀던 노동자·농민·빈민의 요구와는 다른 것이었다. 당시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통찰하고, 그에 걸맞은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룬 성과였다.

둘째는 운동주체의 변화다. 1990년대 시민단체들은 스스로 과제를 설정한 후 시민에게 호소하고 캠페인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커진 여론을 정치권이나 권력기관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방향적인 90년대 방식의 시민운동'은 2002년 월드컵 광장문화와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회현상과 정치 사안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자발적인 개인도 운동의 주체로 사회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동원'되던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 흐름은 이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로 이어진다. 이런 일련의 사회적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이미 만들어진 의제를 제기하고 여론화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의 시민운동은 의제를 만들고 형성해가는 과정이 곧 운동을 조직하고 네트워크화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02년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들의 출현으로 사회운동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될 것이다. 운동주체의 구분이 없어지고 운동방식 역시 다양해지면서, 때로는 개인이 때로는 공간이 때로는 웹사이트나 네트워크 자체가 사회운동의 주체 혹은 장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변화는 개인과 단체, 영리와 비영리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의 형태와 운동의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호간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지금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모든 활동가들의 고민을 수 밖에 없다. “벽을 높히면 다리가 된다”는 말처럼 새로운 변화를 위한 상상이 필요하다.

2. 새로운 변화의 상상 -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이란 용어가 최근 들어 시민사회나 학계, 정부정책 속에서 종종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이전부터 등장했던 개념으로 이미 보편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장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이 등장했던 국가는 미국이다. ‘인프라스트럭처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이라 불리는 미국의 중간지원조직은 1800년대 후반 급증한 지역자선단체(Charity Organization Society)들의 중복적 활동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형태였다. 당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수혜자들의 정보나 그들이 바라는 요구를 조정하고 부당한 이익을 받는 수혜자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들어 비영리섹터 활동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미국의 중간지원조직들도 활동분야나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 지역개발기관(Local Development Agency)으로 불리는 영국의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자원봉사 영역의 역할이 중시되자 정부와 지역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해주는 역할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이다. 일본의 경우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또는 MSO(Management Support Organ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1995년 발생한 고베 대지진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풀뿌리 시민단체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고 이들 중 일부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998년 시민단체의 지원을 위해 NPO법(특정비영리활동추진법)을 제정하였고, NPO에 대한 인재, 자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NPO지원센터가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초기모델이며, 이후 다양한 조직으로 활성화 되었다. 일본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예비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 사업전개, 자금조달, 인재육성, 상당창구, 정보발신, 교류촉진, 코디네이트,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으로는 사업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중간지원 활동 외에 공공시설 위탁운영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다.⁸⁾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들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 중앙부처 중심의 사회적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과 민간간의 중재자, 민간과 민간간의 협력 및 조정자, 부족한 민간역량의 보완 및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으로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 시민교육 중간지원조직 사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령에 의거해 2001년 창립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사업에는 기념관 건립 및 운영, 역사정리를 위한 민주화운동 사료수집 및 관리, 전시, 홍보, 연구와 유적지 보존 및 관리, 홍보, 조사, 연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민주발전 지원 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다. 기념사업회는 창립하면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소에 교육기획부를 설치했다. 이 시기에는 기념사업회의 교육방향과 내용을 정립하기 위한 조사, 연구에 중심을 두었다. 2004년부터는 조사, 연구 뿐 아니라 직접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2006년 이후에는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교육,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교육에 정성을 쏟기 시작했다. 외국 시민교과서 내용을 연구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수요를 조사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현장탐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역사캠프와 대

8) 마상진 외, 해외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과 농촌활성화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9) 이 사례는 2003년 시민교육심포지움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례를 요약정리한 내용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강좌를 개설 운영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대사 직무연수를 시작했으며 선생님들의 민주주의 우수 수업 사례를 격려하는 ‘민주주의 수업사례 나눔 마당’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7년, 6월 항쟁 20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2012년 까지의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5개년 계획은 연구, 개발, 프로그램 확산, 연대와 지원, 사이버 교육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수립되었다. 기념사업회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사업을 보면 연구, 개발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는 해외 여러 선진사례를 조사 하고 수집했으며 각 나라의 시민교육 지침서들도 번역했다. 우리나라 시민교육을 총망라하는 종합 보고서 ‘민주청서21’을 발간하고 민주시민교육 덕성 모형을 연구해 보고서로 냈다. 또한 활동가용 교재 ‘현장지침서’와 ‘우리 시민교육 해 볼래요?’ 자료집을 발간해 활동가들이 시민교육을 이해하도록 도왔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보지 ‘시민교육’를 발간해 국내외 시민교육의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본 민주주의’, ‘419혁명’, 미국시민교육센터 교재를 번안한 ‘정의’, ‘책임’, ‘권위’, ‘프라이버시’을 출간했고 민주주의 가치 동영상 9편, ‘5분 엽서’ 등 보충교재도 제작했다.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는데 어린이에게는 민주주의 현장탐방, 청소년에게는 역사캠프와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자원봉사활동과 민주주의 현장탐방 지원, 시민에게는 시민의 소양을 높이는 시민강좌를 운영했다. 중간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활동가와 시민단체 교육활동가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2008년부터는 풀뿌리민주시민교육의 중간지원조직을 자임하면서, 활동가들을 위한 현장 교육, 시민교육박람회, 미국의 프로젝트시티즌 과정 교육, 대안정책 대회 등 지역 풀뿌리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2) NGO센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대전·광주·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충북, 서울 등에서 시민재단 또는 시민센터(NGO센터)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시민재단이나 한국NGO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주·부산·대구·대전·강원·충북, 서울 7곳에 NGO(NPO, 시민)센터가 있다. 하지만 이들 센터는 대부분 운영비와 사업비는 물론 전문 활동가가 부족한 탓에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NPO센터를 제외하면 상근 활동가가 2~3명에 불과하고 사업비를 뺀 운영비가 연간 1억~2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별 단체들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로선 걸음마 단계로 실험적인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3.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한국사회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참여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를 성장·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5항에서 평생교육 진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2조와 제10조 1.3항 등은 이에 관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간 몇 차례 시도한 민주시민교육 입법 추진 역시 모두 무산되었다.

작년 세월호 사건을 통해 알려진 “가만있어라”는 말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 가만 있는 착한시민을 양성하는 현 제도 교육을 넘어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여 국가적인 민주시민교육지원 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생산 및 지원, 정부 부처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의 유기적 연계, 각 분야의 민주시민교육활동에 대한 정책조정 및 권고,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참여와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좋은 시민(사회) 없이 좋은 정부가 가능할까?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최근의 담론은 시민사회가 과거처럼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펀지’가 아니라, 정책 추진의 첫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협치(거버넌스)¹⁰⁾의 당당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질 수 있는 물적·인적 토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를 두고 모색을 거듭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시민사회의 역량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협치는 커녕 정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들어주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정부기구(NGO)의 성장사를 살펴보면 정부와 기업 쪽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해왔다. 이런 성장을 돕는 제도적인 대안이 ‘중간지원기관’이다. 중간지원기관은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 사이의 중간자로서 조직 사이의 역할을 중재하는 곳을 두루 일컫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NGO(NPO)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연대은행 따위가 모두 이 범주에 든다. 특히 중간지원기관은 시민사회 사이의 연대를 촉진하고,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재정을 지원하고 정부·기업과의 다리 몫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어떤 중간지원조직을 구상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따라 향후 시민사회운동의 판도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시민교육 중간지원조직을 고민할 때이다.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협치 수준은 1점 만점에 0.728점으로 29위에 머물고 있다. 세계 협치 지수(WGI)에서도 2010년 기준 5.47점으로 멕시코와 함께 가장 점수가 낮다. 지속가능한 협치 지수(SGI) 또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다.

[토론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변화지형 만들기

- 민주시민교육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거버넌스 사례 -

김 지 수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이사

1. 민주시민교육 다시 생각하기

2008년 제주도, 2014년 서울특별시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통해 법과 제도를 갖추면서 여러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체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법’이라는 힘이 작용하면서 ‘초스피드’로 2015년 1월 20일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 되면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물량적인 지원이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인성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자 각종 ‘인성 전문가’들이 활개를 띄면서 각종 ‘지도사’ 자격증도 생겨났다고 한다. 한 단체에서는 ‘인성교육실천 인증급수’를 마련해 수준에 따라 1급에서 8급까지 급수증을 발급하는 내용도 내렸으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평가하자’, ‘대입과 연계해야 한다’ 등 비슷한 발상이 쏟아지면서 대학 입학과 연계시키지 않고는 학교에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한국적인 발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지수 개발 연구도 시작된 상태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교원 연수기관 직무연수 과정에 인성교육 역량 강화 과목을 운영하고 교대나 사범대 등에서는 인성 관련과목을 필수로 개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념화 될 수 있는지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의 불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초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 취지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으로 피폐해져 가는 학교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상황은 정반대로 ‘인성을 수업한다’는 법안이 추진되자 사교육 업체들은 발 빠르게 ‘인성’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굳이 민주시민교육의 변화 지형을 이야기하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도 이런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민주시민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의 방법론을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민주시민 수준을 평가하자’, ‘대입과 연계해야 한다’ 등 대학 입학과 연계시키지 않고는 학교에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한국적인 발상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타겟은 ‘학교’와 ‘선생님’이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교원 연수기관 직무 연수 과정에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과목을 운영하고 교대나 사범대 등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과목을 필수로 개설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주시민에 대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기술이 무엇인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고민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시민을 수업하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민주시민교육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례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민주시민교육의 방식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렇지만 “수업하다” 또는 “교육하다”가 아닌 “민주시민 되다”가 되기 위해서는 수업만이 아닌 시민스스로가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 되는 축이 아동·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되다”의 활동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사례를 대신하고자 한다.

1) 시정에 청소년참여 보장한 ‘행복이회’제안대회-경기도 성남시 사례

성남시 ‘청소년행복이회’는 청소년에게 시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 통로를 넓히고 청소년에게 정보 제공이나 자문 의견을 듣는 수준의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 참여로 전환해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성남시청소년행복이회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서는 시장 및 시의원과 함께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 의제를 발굴하며 이 의제들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안전, 교육, 인권 등 주제별로 분과회의(상임위)를 구성하며 학기 중에 상시적으로 분과회의를 열어 의제를 검토하고 선정하기로 돼있다.

2014년 10월 행복이회가 주관한 청소년 제안대회‘청소년 세상에 Go하다’가 열렸는데, 전국 74개 팀이 제안서와 동영상, 캐릭터 3개 부문에 참가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순찰의무제도, 청소년을 위한 주말학교, 신문 기사 속 선정적·유해광고 노출에 대한 규제, 진로센터 개설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체험 정책, 청소년이 견고 싶은 초록길 만들기 프로젝트, 청소년 근로인권 및 권리, 청소년의 여가 보장, 꿈을 꿀 수 있는 권리, 청소년의 여가보장을 위한 필수시간 이수제 실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만들기, 행복을 부르는 벽화 등 듣기만 해도 신나는 제안이 쏟아졌다.

8월에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제출했다. 탄천에 4계절 청소년 캠핑지구를 개설하고 오토바이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성남시와 의회에 요청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보장방안 제안서를 제출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안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활동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양쪽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성남시는 2015년에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출처 :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웁니다(2015), 한겨레신문(주).초록우산어린이재단 p. 97~98 발췌)

2) "안양을 바꾸자" '제2회 안양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개최

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이 주관한 이번행사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의회, 안양시의정회 등이 후원했다. 제안대회는 총 13개팀이 참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오후6시까지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들은 내 고장 안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소년의 관점에서 해결책과 대안책을 직접 제작한 영상과 PPT자료로 발표하는 등 전문 토론회 못지않았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대회장에서 13개팀 80여명 청소년 발표를 꼼꼼히 기록하고 경청하는 등 청소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안양의 모습과 문제점들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또 청소년이 낸 좋은 제안들은 관계부처에 지시해 꼭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청소년들은 지난 6월 21일부터 2개월 간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교육, 현장조사, 설문조사, 우수 사례 등을 수집했으며, 각 팀별로 정책 전문가와 1:1 멘토링을 통해 대회를 준비했다.

한편, 대상인 안양시장상에는 대안중학교 베가(담당교사 조재남)팀이 제안한 '평촌학원가 내 청소년 휴게 공간 만들기'가 선정됐다.

학생들이 제안서에서 평촌학원가 내 유희 공간, 지하도 등을 활용한 청소년 휴식공간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범계역 교통문제'를 제안한 대안여중 한울팀이 최우수상을, '숨쉬는 교정만들기' 양명여자고 조용한 사과팀, '금연거리 조성' 평촌고 청바지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가한 이우진 학생은 "친구들과 정책제안대회를 준비하며 보낸 이번 여름방학기간이 매우 알차고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회를 총괄한 조용덕 대표이사는 "지난 대회에 비해 한층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과, 짧은 시간동안 준비했음에도 청소년들이 안양시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심의 수준에 놀랐다"고 말했다.

(※출처 : 2014-09-02 06:23CBS노컷뉴스 임덕철 기자/ 안양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이 사회참여 기회 제공)

3) 청소년이 만드는 마을의제 - 군포시 당동마을 사례-

가. 청소년들이 만드는 마을 의제의 의의

마을의제는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다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 의제들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의제들은 이후 주민들의 주체적 실천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이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대체로 조례 등의 제도에서는 주민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와 해당지역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으로 규정하는 편이다. 사전적으로도 주민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런 원론적 주민 규정과 별도로 주민참여를 언급한 제도의 실제 적용 대상은 주로 19세 이상의 유권자로 해석되곤 한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기보다는 주로 교육 및 배려의 대상인 주민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 대해 흔히 '미래 세대'라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라는 의미를 담는다. 그런데 이 의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을 받아야하고 배려 받아야 하는 의미로만 국한되어 악용되곤 한다. 즉,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주체적 존재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상, 이들도 우리의 현 시대를 함께 책임져야 할 당당한 주체다. 이들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고려한다 해도, 이들이 현 시대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 시민으로 훈련되고 그러한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을 '미래 세대'로 구분하는 것도 미래에 이들에게 주어질 역할만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도 이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이자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이 녹아들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 속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이들의 직접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있어도, 이는 그들만의 리그로 한정되곤 한다. 아직은 어른들에 의해 대변 받아야 할 존재라는 이유로 말이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으며, 그래서 이들은 항상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 배제 계층으로 분류되곤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사회는 그 모습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른들에 의해 규정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가 항상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라 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지역사회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게다가 청소년들은 항상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소외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문제도 발생된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를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는 이들만의 리그로 갇히지 않고, 다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는 마을의제가 보다 많은 주민들과의 폭넓은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그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나. 군포시 당동 지역 청소년들의 마을의제 실험

청소년들의 마을의제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며, 다른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 의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지역의 당당한 주체로서의 시민성을 강화하는 훈련 과정이기도 하며, 현재의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군포시 당동 지역 청소년들의 마을의제 작성과 실천계획 수립 과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의의와 정당성이 있다. 그 시작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마을의제를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및 지원으로 구체적 실천계획까지 나아간 것은 더욱 바람직

한 모습이라 평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청소년 마을의제 사업으로서의 모범적 모습만이 아니라, 마을의제 사업 그 자체로서도 모범적인 사례로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당동지역 청소년들의 마을의제를 만들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온 1년 여 작업 과정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이러한 마을의제 작성 작업을 통해 다음 해의 구체적 실천사업으로까지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마을의제 사업이 갖는 의의를 충족시키는 과정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마을의제“마을 팔로잉”결과보고서)

다. 사업의 목적과 목표



7월	2일	문화워크숍(군포중 2학년 3반, 8반, 9반) 25명*3개반	75명
7월	4일	문화워크숍(군포중 2학년 6반, 7반) 25명*2개반	50명
7월	9일	실무자 회의	5명
7월	16일	문화워크숍 (군포중학교 3학년 8개반) 25명*8개반	200명
7월	18일	실무자 회의	5명
7월	29일	마을 오픈 컨퍼런스(초등 3개교)	60명
7월	29일~31일	마을 현장조사 (조사자 : 4명)	명
8월	1일	마을 현장조사 (조사자 : 4명)	명
8월	5일~9일	마을 현장조사 (조사자 : 4명)	명
8월	6일	마을 오픈 컨퍼런스(재궁동공원)	200명
9월	30일	설문조사 내용 최종 마무리	289명
10월	16일	중학생과 함께 하는 테이블 토론 형태의 오픈 컨퍼런스	60명
10월	18일	마을잔치와 연결된 마을 오픈 컨퍼런스 개최	500명

바. 마을의제 만드는 과정에서의 성과

가)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당동마을의 단기, 중기, 장기 마을의제들을 발굴할 수 있었으며, 발굴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계획들에 대해서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 마을조사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말에 혼자 집에서 밥을 먹거나 먹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5월 말부터 토요일간식카페“배불러”를 운영하게 되었다.

마을조사사업을 시작하면서 2013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주말에 혼자 집에서 밥을 먹거나 먹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말부터 첫째, 셋째주 토요일 토요일간식카페“배불러”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10월 말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희망연대에서의 지원으로 5월 말부터 시작된 토요일간식카페 ‘배불러’는 9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1월까지 한시적이지만 이를 통해 지역학부모들과의 연계를 통해 자원활동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지역학부모들과의 연계는 카페운영뿐만이 아니라 방과후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될 예정이며, 현재는 특수학급청소년을 포함한 가족공예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 당동마을의제를 작성하면서 지역의 학부모모임, 청년모임들을 시작할 수 있었다.

간식카페운영을 위해 지역청년들이 결합되면서, 8월 말에는 청년모임이 시작되었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나누기 수다가 매월 1회씩 진행 중에 있다. 논의 주제는 청년 놀이문화를 중심으로 해 현재 3번의 모임이 진행되었고, 11월 8일 지역의 수리산 야간 산행을 통해 청년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의 자발적인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다.

- 의제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들이 마을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네트워크들이 구성되는 기초가 되었다.

- 초등학교 3개교와 함께 마을의 문제 수집을 위한 오픈컨퍼런스 통해 조사되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행복한 동네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었다.

행복한 동네 버킷리스트

동네에서 바바리맨은 절대보고 싶지 않아
 아파트 윗층에서 쓰레기 투척하는 사람 양심에 털났어
 음식물쓰레기 냄새는 코를 막게 해
 술병과 담배꽂초가 나뒹구는 골목은 불쾌지수를 높혀
 흔들리는 육교는 다리를 후들거리게 해
 시도 때도 없이 개짖는 소리 시끄러워 죽겠어
 집, 학교, 동네에서 욕하는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어디서든 따돌림은 없었으면 좋겠어

길바닥에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은 싫어
 사고로 죽은 사람의 시체만나기 싫어
 닭돌긴지 비둘긴지 너무 많아 도시가 새똥으로 가득해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초등학교에 들어와 침 뱉고, 행패부리는 것
 내 심장을 콩알만 하게 만들어
 이런 거 다 사라지면 우리 동네는 행복해 지겠지?

어둔 밤 골목길 걸어도 가로등 때문에 절대 무섭지 않아
 마을버스 제때제때 와주어서 어디든 늦지 않고 갈 수 있어 좋아
 보행권 침해하는 불법주차 없어서 골목길에서도 뛰어다닐 수 있어
 돈 없어도 배우고 싶은 것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어
 노래, 게임, 운동 기타 등등 어디서든 맘 편히 놀 수 있어
 준비물 까먹어도 괜찮아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살 수 있어
 값싸고 맛있는 분식점이 있어 배불러(무료 간식카페는 없을까?)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생겨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아
 급해도 괜찮아 공중화장실 있어
 핸드폰이 없어도 전화할 수 있어 공중전화가 있어서
 절대 고장 나지 않는 신호등이 있어 혼자서도 길 건너
 바바리맨, 일진, 나쁜사람들이 사라져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듣기 싫은 잔소리, 싸우는 소리가 사라져서 행복해
 이런 거 다 있어서 우리 동네는 행복해 지겠지?

나) 예상 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 및 애로사항 등

- 문화워킹숍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이 쉽지 않아 마을 설문 조사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오픈컨퍼런스에서 실천방법을 찾는 데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며, 실천방법의 다양성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청소년들의 일정들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에 시험기간, 여름방학 등을 고려하여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의제작성기간이 너무 짧아서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기가 어려웠다.

다) 마을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순위	의제 내용	실천계획	기간
1	쓰레기통이 없어 길거리가 지저분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통이 길거리에서 사라진 이유를 조사한다. - 쓰레기통을 설치할 곳을 조사한다. - 쓰레기통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 - 쓰레기통 설치를 건의하기 위해 군포시와 군포 시의회에 건의한다. -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 본다. 	중기
2	가로등이 없어 골목길이 너무 어둡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골목길을 조사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포시 해당 부서에 가로등설치를 위한 민원을 넣는다. 	단기
3	불법 쓰레기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버려지는 곳을 조사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쓰레기 배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 모은 아이디어로 직접 불법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버려지는 곳에 실천해 본다. 	장기
4	불법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포시 교통과에 민원을 넣는다. - 불법주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찾아본 방식들을 실천해 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실천한다. 	장기
5	목마를 때 물 마실 곳이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수대가 필요한 지점들을 조사한다.(특히 공원들을 중심으로 식수대가 설치되지 않는 곳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순위를 매겨서 군 	중기

		포시와 군포시의회의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 식수대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치를 요구한다.	
--	--	---	--

라) 마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순위	의제 내용	실천계획	기간
1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마을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중복	중기
2	공공화장실	- 공공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한다. - 공공화장실 설치를 건의하기 위해 군포시와 군포시의회에 건의한다. - 공공화장실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	장기
3	큰 공원	당동지역 일대가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어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검토
4	자전거 무료대여소	- 시장과 시의회에 대한 면담요청	
5	운동시설 (수영장 등)	- 시장과 시의회에 대한 면담요청	

4)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만들기

가. 사업목적

- 청소년들이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 필요한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고,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삶을 도와주고 의논하는 사람, 민주적인 삶을 함께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사업추진내용

구 분	추진 계획	추진 실적
참가학교들과 일정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확정 ○참가학교들과 교육일정 협의 및 확정 ○교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 5회차 개발 ○전문강사 : 7명 확정 ○교육일정 : 96회 확정
중학생 민주시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인 - 연인원 : 3,450명 - 실인원 : 69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인원 : 연인원(2,750명),실인원(801명) - 군포중: 2학년*8개반*5회차*25명=1,125명(200명) - 군포중: 3학년*9개반*2회차*25명=400명(225명) - 곡란중: 2학년*6개반*5회차*35명=1,050명(201명) - 흥진중: 2학년*5개반*1회차*35명=175명(175명)
청소년참여 활동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반별로 청소년참여활동 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활동 진행 ○ 활동한 내용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참여활동 지원: 20개 팀 ○활동한 내용들 정리: 20개 팀 ○청소년참여활동 심사 및 시상
오픈컨퍼런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 : 민주시민교육을 받고 참여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대상 선착순 100명 ○테이블 진행자 미팅 ○오픈컨퍼런스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픈컨퍼런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 - 일시 : 10월 14일(화) 13:30~16:40 - 장소 : 군포중 컴퓨터실(3층) - 참여인원 : 60명(청소년 50명, 진행 및 스텝 10명) - 테이블 진행자 및 스텝 미팅 : 행사당일(12:00~13:00) 8명 - 청소년사회참여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조사(1. 돈, 2. 시간, 3. 동기부여, 4. 나이 순으로 조사됨) - 해결방법 모색(5가지방법 찾음) - 마을문제 해결방법 도출(5가지)
결과보고 정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보고서로 정리	- 설문조사 (573부) - 결과보고서 정리 - 평가회의 내용 정리(2회)

다. 사업성과

- 청소년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 필요한 민주적 자질 함양 및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 청소년대상 민주시민교육과 활동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삶을 도와주고 의논하면서 민주적인 삶을 함께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청소년참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 청소년들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관계 맺는 방법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주민들이 청소년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라포를 형성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 오픈컨퍼런스를 통해 청소년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청소년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개기를 마련하였다.

3. 글을 마무리하면서

“내 생각에 사람들이 안전 상태를 지속하려면 그들은 타인과 상관없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거대한 사안이 아니라 틀림없이 사소한 것들이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민주시민교육은 결국 “교육하다”가 아니라 “민주시민 되다”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살아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삶이 다양한 영역에서 충만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힘과 온기 그리고 사랑으로 추동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체성을 장착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이 되어 가는지, 시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민주적이게 만드는지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 실마리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고민은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거버넌스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별로 직접시행하고 있는 많은 시민대상의 교육들을 지자체 직접사업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색깔에 맞춰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관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모사업형태도 아니어야 한다. 관이 교육내용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스스로 만들고 배워나가고 진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토론 3]

기초단위의 거버넌스 사례

오 경 옥 청소년문화발전소 소장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성(citizenship)’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천적 교육 영역(조상식, 2009)으로, 풀뿌리를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대상에게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필요성과 이론적 정당성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도 형식적인 학교교육과 비형식적인 성인교육에서 중요한 실천과제로 다루어져 왔다(김신일, 1994, 1999; 전득주/김수근/허영식, 2007).

여기에서는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공동체에 기초한 참여학습 패러다임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기반으로 기초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 사례를 들고자 한다.

□ 공동체 기초한 참여학습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1. 인성교육

-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씨클 운영
- 공감과 치유 중심의 학교폭력예방교육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료교육

2. 자치교육

- 학생 스스로 만드는 학교, 문화를 위하여 학급-학교-지역 연계한 학생자치활동
- 동아리 중심

3. 민주·평화·세계시민교육

- 평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 소통과 공감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민주시민교육 기관과 연계 협력한 학교 교육
4. 마을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학습 경험 확산
- 마을형학교(서울), 마을교육공동체(경기) 운영
 - 지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계 : 2016년 자유학기제 준비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기 위한 마을자원 확보
 - 대입상담 및 진로상담 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아카데미 운영
 - 소규모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사례

교육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형식적 교육이 우선할 때는 교사인 교육자가 교육의 주체, 배움의 대상자인 학생(주로 아동·청소년)이 객체로 구분되었고 교육자료인 교재와 함께 교육의 3요소였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교사의 사전 계획에 의해 진행되었고 교사가 수업을 통제하였고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하는 비민주적인 형태의 교육이 자행되었다. (교육 1.0)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교육은 학생의 주체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교사의 일방적인 교수학습보다는 학생 자신의 자기표현과 자아실현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욕구와 흥미 등에 따른 학습이 전개되었고 참여형 학습과 문제해결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교육 2.0)

여기에 덧붙여 기술의 진일보와 함께 웹 2.0 시대를 넘어 웹 3.0 시대가 됨에 따라 창의적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식을 요구함에 따라 교육 3.0의 시대가 도래했다. 폐쇄적인 교육이 아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개방성과 집단지성을 통해 교사는 지식, 정보, 기술, 가치 전달자를 벗어난 다양한 학습을 융화시킬 수 있는 코디네이

터의 역할과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2012년 미국 시작)를 통한 배움 이후의 과정 기획과 질문을 통한 학습 성취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 촉진자(퍼실리테이터)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이러한 변화 흐름을 풀뿌리단체 역시 수용하여 교육 2.0의 방식을 넘어 교육 3.0을 위해 우리의 사고를 일깨워주고 확장시킬 수 있는 촉진자를 양성하여 보다 민주시민교육의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희망네트워크는 2015년 사업으로 촉진자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개설, 전국 지부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이 가능한 원탁토론을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이 가능한 원탁토론 어떻게 만들까?

촉진자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참여자 모집합니다



다양한 방법과 영역에서 대규모 토론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 반가운 일이지요.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꼭 100명 200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일까요? 그 절차와 과정은 소규모 모임에서도 적용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 "교육희망네트워크형" 원탁토론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학습과 실천을 위한 모임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진행합니다.

이론을 학습하는 과정을 지양하고, 일화와 사례를 담은 활동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배우는 과정으로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산다제이(산 교육 매뉴얼)" "산다제이(산 교육 매뉴얼)" 등 촉진자를 위한 자료를 지원 예정입니다.

누구나 기획자, 촉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의 과정에서부터 함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동 장소 : 동산산 4층 어울림홀(매주 월요일 9시~12시)

회차	일시	주요	내용
1회차	5월 7일(목)	토론과 학습	개념하기, 경험하기
2회차	5월 14일(목)	토론과 학습	원칙과 원리, 토론법, 참여방법
3회차	5월 21일(목)	토론과 학습	토론과 학습
4회차	5월 28일(목)	토론과 학습	토론과 학습
5회차	6월 4일(목)	토론과 학습	토론과 학습
6회차	6월 11일(목)	토론과 학습	토론과 학습
7회차	6월 18일(목)	토론과 학습	토론과 학습
8회차	6월 25일(목)	토론과 학습	토론과 학습
9회차	7월 2일(목)	토론과 학습	토론과 학습
10회차	7월 9일(목)	토론과 학습	토론과 학습

참가신청: eduhope.net@hanmail.net으로 이름, 연락처, 참여동기를 보내주세요
문의: 010-2389-0157

주최 - 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2.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한 청소년 멘토 교육

소통과 혁신을 위한 방법으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한 쌍방향 교육은 참여자들을 신명나게 교육 속으로 이끌어낸다.

특정 전문가 한 사람의 지적정보를 공유하기 보다는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의 힘이 더 크며 여기서 창출된

결과물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통합된 지성을 공유할 때, 교육 3.0에 가까운 접근을 모색할 수 있다.

2014년부터 금천구청 교육복지과와 금천교육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발전소는 청소년멘토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복지 대상자를 향한 금천구청의 힘있는 의지와 마을 청년활동가를 모집하고 학교와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복지센터, 자원활동가 양성 및 슈퍼비전을 담당하는 청소년문화발전소의 협력은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다.



3. 청소년참여활동을 마을로 확산시키다.

노원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는 2011년부터 청소년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과제를 찾아 이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회참여활동으로, 3명 이상의 구성원이 하나의 모임을 구성하여 참여한다.

노원구 자체 교육 브랜드인 '마을이 학교다'와 궤를 같이하며, 마을 속에서 청소년들이 뜻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스스로 기획하는 힘을 기르는 한편, 자신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대중 앞에서 보고하는 활동을 통해 경험을 재구성하고, 읽고 쓰고 말하는 힘을 기르는 종합적인 교육 활동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실천하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성장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한 모습이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공릉동을 중심으로 한 시작된 변화는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노원교육복지재단과 함께 하면서 노원구 전역으로 확대, 노원구청과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시민 역량강화교육인 시작된 변화는 경험이 최고의 학습이라는 ‘경험에 의한 학습’,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봉사교육’이며, 청소년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결과를 정리 발표하는 ‘실천적 참여 교육’이자 건강한 시민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고 익히는 ‘시민교육’이다. 또한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가며 함께 활동과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가는 ‘협동교육’과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사람들을 더 알아가고 애정을 키우는 ‘뿌리교육’이다.



4. 타운미팅과 원탁회의

○ 청소년원탁토론

미디어가 갖는 힘일까? 지난 2003년 EBS는 <토크 한마당-사제부일체>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 이후, 청소년에,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토론프로그램 <청소년원탁토론>을 국내 방송사상 처음으로 진행했다. 명확한 논리를 가진 전문가도 아니고 시청자들의 속을 후련하게 만드는 언변을 가진 논객들로 구성된 것이 아닌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주위에서 스쳐지나가다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아이템 선정, 촬영, 자료조사, 진행까지 담당하는 다분히 실험성 강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일까? 청소년이슈가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청소년원탁토론.



지난 2012년, 청소년의 투표권을 놓고 청소년 300인 원탁토론 “10대, 꿈꾸는 학교 희망의 대한민국을 말하다”가 진행됐다.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서울YWCA Y-TEEN, 21세기공동체 희망, 흥사단, 2013 새로운교육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서울시 교육위원회, 청소년 300인이 협업하여 학생의날인 11월 3일(토)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을 뜨겁게 달궜다.

청소년이 꿈꾸는 학교, 동네, 세상을 위해 10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풀뿌리단체 활동가가 있고, 교육운동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싶은 대한민국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2년 대한민국을 사는 청소년들의 행복은? “청소년 삶의 질, 인권과 복지”, 학생을 살리는 교육? 죽이는 교육? “교육과 입시제도”, 청소년 문화? 자치는 어디에?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와 문화”를 중심으로 10명의 청소년들이 하나의 원탁

을 구성하여 토론질문에 따라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한 결과는 11월 3일(토) 오후 3시, 2013 새로운교육실현 국민연대 범국민대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물론, 이날 진행된 행사는 기초단위 보다는 확대된 전국 42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용인, 이천, 화성, 원주, 춘천, 횡성, 아산, 천안, 충주, 거제, 거창, 김해, 진주, 구미, 안동, 영주, 예천, 의성, 문경, 나주, 목포, 순천, 여수, 군산, 나주, 익산) 300여명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 31개의 테이블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 대한민국 교육원탁회의
(가칭 4.16교육포럼)

- 교육을 둘러싼 담론이나 정책들이 진영과 정파에 따라 중구난방 하고 갈등과 대립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모임.(2014년 11월)
- 4월 16일,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앵그리맘과 시민들의 분노와 성찰, 뜻있는 교육자들의 반성이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원탁회의 형태의 포럼을 통해 본격적인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 시작.(2014년 12월부터 진행)
- 한국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혁신을 위한 소통과 대화를 촉진하고, 폭넓게 공론을 모으며, 국민적 합의를 지향함.
- 합의와 해결이 어려운 과제보다 폭넓게 합의할 수 있는 과제들(초·중등교육, 어린이·청소년, 직업교육, 대학교육, 시민교육, 평생학습) 중



심으로 교사나 교육전문가, 학부모, 시민, 문화인, 예술가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단기적인 정책 과제를 넘어 중장기적인 비전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둬.

□ 그 밖의...

이밖에도 자치구 단위로 활동하는 풀뿌리단체들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다양한 부설기관과 마을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육아, 공부방, 대안학교, 작은도서관, 자활센터, 생협 그리고 다양한 나눔활동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풀뿌리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다.

자치활동, 노동인권교육, 역사교육, 통일교육을 아우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을 꾀하고 있다.

한 단체만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민-민, 민-관, 민관협치를 통한 거버넌스를 통해 서로 협업을 통한 상생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책포럼

시민사회와 서울의 공익이슈를 주제로 2015년 총 7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회차의 포럼 자료집 내려받기와
이후 개최되는 포럼에 대한 안내는
서울시NPO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eoulnpocenter.kr

■ 문의

서울시NPO지원센터 교육정책팀

임오윤 매니저 070-7727-7649 romaroo@seoulnpocenter.kr

01

NPO의 소셜임팩트와 이슈의 흐름

六六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금을 확인하고, 미래를 그려내는 것은 NPO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위해 중요합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작년 한 해 NPO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형적 흐름을 추적하여 NPO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위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NPO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지기 위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시도,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	내용
16:00 - 16:30	발표 1. NPO와 소셜임팩트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보고 김정태 (MYSOC 대표)
16:30 - 17:00	발표 2. 서울시NPO이슈분석 연구 보고 조철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한일장신대 NGO정책연구소 연구원
17:00 - 17:20	지정토론 1.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NPO 관점의 소셜임팩트에 대해" 2.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NPO이슈 및 조직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해"
17:20 - 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_주성수 교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위원장)

0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개선 방향: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제를 중심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에 관한 시
민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의 개
선 과제와 방향에 대한 대응을 논의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용

발표 1. 비영리민간단체 법제 개선 운동의 맥락과 지형 이해
조철민 한일장신대 연구교수

발표 2. <가칭> 시민사회발전기본법>에 담긴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
좌세준 법무법인한맥 변호사

토론
서경원 아름다운재단 기획조정실장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
김종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정희선 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서정훈 광주NGO센터 센터장
김해몽 (사)부산시민센터 센터장
윤종화 (사)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03

민주시민교육 변화지형과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사회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2014년 서울시 민주시민 교육지원 조례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되었던 민주시민 교육의 경험과 지형을 살펴보고, 지역 단위 거버넌스의 역할을 살펴보고 방향을 모색합니다.

사회 위정희 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눔교육센터장

발표	〈지역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본 민주시민교육 지형의 변화〉 김미란 경기도 광명시평생학습원 원장
토론 1.	〈중간지원조직 공공기관 거버넌스 사례〉 이필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위원장
토론 2.	〈기초자치단체와 거버넌스 사례〉 김지수 인생나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토론 3.	〈기초단위의 거버넌스 사례〉 오경옥 청소년문화발전소 소장